

2012. 3. 6.

#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3월 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# 「한국경제의 재조명」 4차 공개토론회 "가계부채,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"

- 일 시: 2012년 3월 6일(화) 9:30 ~ 12:00
- 장 소: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
- 주 최: KDI
- 후 원: 조선일보

- KDI는 3월 6일, '가계부채,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'라는 주제로 「한국경제의 재조명」 4차 가계부채 부문 공개토론회를 개최,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핵심 현안인 가계부채 부문의 현황을 점검하고,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함.
- 이번 토론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,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, 이건호 KB국민은행 부행장, 전복수 KBS 해설위원, 최진배 경성대학교 교수 등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가계대출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연착륙 방안을 제시

- KDI는 2월 7일부터 6회에 걸쳐 「한국경제의 재조명」 공개토론회를 개최, 총론, 복지, 일자리, 가계부채, 기업, 대외 등 한국 경제 중요 현안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정책방향을 제안함.

※문의: 강동수 KDI 거시·금융정책연구부장(02-958-4076)

- ❖ 첨부 1. 발표 요약
- ❖ 첨부 2. 「한국경제의 재조명」 4차 가계부채 부문 토론회 프로그램

## ❖ 첨부 1. 발표 요약

# [가계부채] 가계부채, 한국경제의 뇌관인가?

강 동 수 KDI 거시·금융정책연구부장

-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경제의 내성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음.
  -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912.8조원
    - 2002년 464.7조원에 비해 최근 10년 사이 약 두 배의 증가를 기록
  - IMF, Moody's, FT, WSJ 등은 금리인상,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라 한국가계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계부채가 향후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지목
-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수준, 속도, 질의 세 가지 측면의 문제를 안고 있음.
  - 첫째, 명목 GDP의 72%, 가처분소득의 157%를 차지하는 가계부채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
    - OECD 국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평균은 135%임.
  - 둘째, 2005년 이래 금융부채증가율이 가처분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
  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조정이 실시된 영국, 미국, 일본, 독일 등과 대비되는 현상
  - 셋째, 2007년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는 비은행금융회사가 주도하고 있어 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.
    - 2007년 이후 은행의 가계신용증가율은 연평균 5.8%지만, 제2금융권인 신탁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19.2%와 20.5%임.

□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.

-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었으며,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통화정책이 이완
-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는 자산 증대 위주의 수익모델을 추구했는데, 금융회사의 자산이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대체
- 자금의 수요자인 가계의 경우, 고소득층은 투자를 위해 부채를 적극 활용했고, 저소득층은 전세가격 상승, 생활고 등으로 인해 생계형 자금이 필요

□ 가계부채가 시스템위기의 요인은 아니지만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.

- 채무비중이 높은 가계의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이 높고 주택가격의 급락 가능성 및 급락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스템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.
-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어서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.
-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로, 이는 사회문제를 넘어 정치적 쟁점, 그리고 재정적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음.

□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통화, 금융감독, 사회복지 정책 등이 병행될 필요

-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
  - 부(-)의 실질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저축의 유인을 하락시키고 “빚내어 소비”하라는 왜곡된 경제생활을 초래할 수 있음.
-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LTV, DTI 등 금융감독지표의 완화를 지양

- LTV, DTI 등은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경기와 무관하게 유지될 필요

-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미시건전성 감독 강화 필요

- 금융회사별 자산증가율을 고려해 금융검사를 강화하고, 고위험 대출, 다중대출, 편중대출에 대하여 위험가중치를 인상하며, 대출상품 만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

- 가계대출의 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강화

- 취약계층 금융거래 실태의 입체적인 파악이 선결 과제

-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시 컨설팅을 부가해 부실화를 방지

- ※컨설팅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증가는 정부에서 보조하되, 금융회사 또는 퇴직금융인의 지식 및 경험 기부와 연계

- 생계형 자금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절차를 개선

❖ 첨부 2. 「한국경제의 재조명」 4차 가계부채 부문 토론회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
09:30~10:00	등록 및 네트워킹
10:00~10:10	<b>개회사</b> 현오석 KDI 원장
10:10~10:30	<b>발 표. 가계부채, 한국경제의 뇌관인가?</b> 강동수 KDI 거시·금융정책연구부장
10:30~12:00	<b>사 회</b> 현오석 KDI 원장  <b>토 론</b>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건호 KB국민은행 부행장 전복수 KBS 해설위원 최진배 경성대학교 교수